

세월호 침몰 지면 안내 - '국민 安全' 시스템이 없는 나라▶2 합수부, 운항 문제점 집중 수사▶3 기름유출에 어민들 '이중고'▶4 국민 90% "초동대처 늦어 피해 컸다"▶7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9728호 1판 2014년 4월 28일 월요일 (음력 3월 29일)

青 “정총리 사의수용” 野 “대통령 사과해야”

사고 수습 뒤 사표 수리키로
여론조사 46% “내각 총사퇴”



세월호 참사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되면서 급기야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특히 정총리의 사퇴와 함께 내각 총사퇴 여론이 확산하면서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최대 위기 상황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 향후 박근혜 대통령의 믿을 수 있는 관계까지 나오고 있다.

나아가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할 경우, 박근혜정부 출범 후 비교적 탄탄하게 다져온 정권의 기반이 솟드워 차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정총리는 세월호 참사 발생 12일째인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세월호 참사 책임을 지고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박근혜정부 초대 총리로 취임한 지 42일 만이다.

이에 민경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정총리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한 것에 대해 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수리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구조작업과 사고 수습으로 이어 죄우선이기 때문에 사고 수습 이후 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박 대통령이 말씀)했다”고 덧붙였다.

정총리의 사퇴가 현실화되면서 참사 후급부상한 개각 불가피론이 더욱 확산할 것이 확실시된다. 특히 국민과 정치권 일각에서 요구하는 내각 총사퇴의 신호탄이 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리서치부와 팩트TV의 여론조사에서 과반에 가까운 46%의 국민이 내각 총사퇴로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7면>

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이번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과 관련해 부분 개각과 내각 총사퇴 중 정부개편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부분개각(26.5%)에 비해 내각총사퇴(46.0%)를 해야 한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권도 정총리의 사의 표명 정도로 이 사

탑승 476명 구조 174명
실종 114명 사망 188명
※ 27일 오후 8시 현재

태가 수습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내각 총사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야당도 정총리의 사퇴를 ‘국면전환용’으로 규정하고 이번 사고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점에서 내각의 수장인 총리가 홀로 사퇴를 선언한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자세며 비겁한 회피”라며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총리의 사퇴에 대해 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들은 “무책임하다”며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고 “당연한 결과”라며 수용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홍원 총리가 27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사의의 표명을 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후 여객선 세월호 침몰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의 임시 학동분향소인 경기도 안산 올림픽기념관을 찾기 위한 추모객들이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기념관 인근 고잔초등학교 운동장까지 긴 줄을 만들고 있다. ▶ 관련기사 2면

구조·수색 여건 최악 진도 VTS 압수수색

姜·李 “전략공천 땐 중대 결단”

새정치 지도부에 “광주시장 경선률 30일까지 확정” 최후통첩

전남지사 후보들 ‘룰 미팅’ 합의 실패 … 전략공천說도 ‘솔솔’

광주시장 후보 선출과 관련, 강운태 광주시장과 이용섭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에 오는 30일까지 경선 률 확정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5면>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도 더 이상 광주시장 후보 경선을 미루 시간도, 명분도 없다는 점에서 이번 주 내에 경선 실시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강운태 광주시장과 이용섭 국회의원은 27일 조찬 회동을 갖고 이달 말까지 광주시장 경선 방법과 일정을 발표할 것을 중앙당에 촉구했다.

이날 강 시장과 이 의원은 공동 합의문을 통해 “광주시민은 시민의 선택권이 배제되고 특정 후보를 중앙당이 일정하는 전략공천이 강행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시장과 이 의원은 경선 률과 관련, “전남지사 후보 경선 방법과 같이 ‘여론조사

50%+공론조사 50%’가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어 “일부에서 거론되는 ‘100% 공론조사’는 동원과 조직의 위험이 크며 세월호 참사에 따른 국민적 애도 분위기에도 맞지 않으므로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두 사람은 특히 “특정후보 지지를 선언한 광주 국회의원 5명은 광주시당·공천관리위원회를 사퇴해야 한다”며 “중앙당이 조직을 하지 않으면 광주의 경선 부정을 묵인·방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과 이 의원은 “이 같은 요구가 오는 30일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소속 출마 등)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강 시장과 이 의원이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낸에 따라 ‘전략공천설’을 힘리며 버티기로 일관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도 이번 주 내에 광주시장 후보 경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전남지사 후보들은 지난 25일 룰 미팅을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남지사 후보 경선 률은 당초 ‘여론조사 50%+공론조사식 배심원제 50%’로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경선 일정은 종양당에서 확정할 전망이다.

하지만 2명이 넘는 당원들에 대한 당비 대납 과문 등으로 당내에서 전남지사 후보 전략공천설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도시재생,
문화가 해법이다 ▶13면

학교설립 60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The C-Class 36개월 무이자 할부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Mercedes-Benz